

# 최근 경기 침체와 비정규 일자리 변동

---

2008.06.11 | 이상동\_새사연 연구원 | sdlee@cins.or.kr

---

## 목 차

1. 경기 동향: 한국 실물경제 가파르게 하강
2. 고용 동향: 비정규직 숫자는 줄었으나 양극화는 심화
3. 최근 비정규 일자리 변동의 특징
4. 정책적 제언



<http://saesayon.org>

## 요 약

지난 5월 29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줄었으나 상대적인 노동여건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비정규직 숫자의 감소는 정규직화로 전환되었다기 보다는 경제하강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 신규취업자 규모를 줄이는 바람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정규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은 취업자는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추세가 발견되고 있다. 영세자영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노동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는데, 월급여, 근속기간, 퇴직금수혜율, 노동보험수혜율이 모두 지난 해보다 나빠졌다. 이들 항목은 정규직 대비 각각 61%, 36%, 45%, 57% 수준에 불과해 지난 해 보다 -3.6%p, -1.1%p, -3.5%p, -2.7%p 만큼 차별이 커졌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한 까닭에 실제 차별의 정도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비정규직 내에서의 분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핵심노동계층인 남성 중, 장년층은 파견, 용역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비전형 노동자’로 집중되고 주변부노동계층인 여성, 청년과 노년층은 핵심노동계층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노동형태가 분업화, 고착화된다면 한국 노동시장의 차별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경기하강에 대비한 고용대책이 시급하다. 특히나 하반기에 경기는 더욱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노동계층의 고통이 극심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기침체 국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 민생경제의 핵심 타겟은 영세 자영 노동자들이 되어야 하고, △ 노동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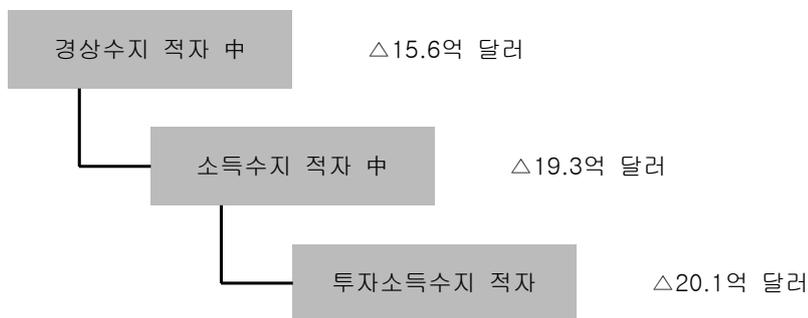


었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장기간 호전의 기회를 잡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실질소득(GNI) 하락과 국제수지 적자**

- 1분기 실질국민소득(GNI)은 전기대비 -1.2% 감소함(전년동기대비 1.3% 성장). 이 수치는 2003년 1분기 -1.6% 이후 최악의 성적표에 해당. GNI 성장률의 감소는 무역조건의 악화에 따른 것임. 3월 기준으로 수출단가지수가 7.0% 증가한 데 비해 수입단가지수는 20.3%나 증가해서 교역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음. 이러한 실질무역손실이 사상 최대치인 27조 4,000억 원, GDP의 13.3%에까지 도달함. 즉, 국내 생산의 약 1/7에 해당되는 가치가 해외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올해 들어서 국제수지의 악화도 심상치 않음. 작년 12월부터 적자를 이어 오던 상품 및 서비스 수지가 올 4월에 6억 7,000만 달러 흑자로 반전되었으나, 같은 달 소득수지 적자가 -19억 3,000만 달러, 경상이전수지 적자가 -3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 적자는 -15억 6,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12월 이후 4월까지 연속 누적 경상수지 적자는 약 -75억 달러에 달함.
- 소득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 중에서 특히 투자소득수지 적자 폭이 올해 들어 급격히 확대되었음. 4월달 현재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가 모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투자소득수지 적자는 총 -20억 1,000만 달러에 달함.

그림 2. 국제수지 적자 구조 (2008년 4월)



## 2. 고용 동향: 비정규직 숫자는 줄었으나 양극화는 심화

- 경기하강과 더불어 일자리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음.

### ■ 전체 동향: 취약노동 계층의 일자리 감소

- 현재 민생경제의 가장 큰 난제는 고용 문제에 있음. 신규취업자가 올해 들어 20만 명 밑으로 급락. 특히 자영업자들과 임시 및 일용 노동자들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증가율이 감소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0월경부터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먼저 2007년 8월부터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11월에는 남성 취업자 증가폭도 감소하기 시작함. 종사상 지위별에서는 2003년 이후 비임금노동자 일자리가 감소 추세를 이어간 가운데, 최근 임시직, 일용직 취업자도 감소함. 이들은 한국경제에서 경기변동에 취약한 계층임.
- 취약노동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좋은 상용직의 일자리 증가폭이 미미해 이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

표 1. 최근 6개월 주요 고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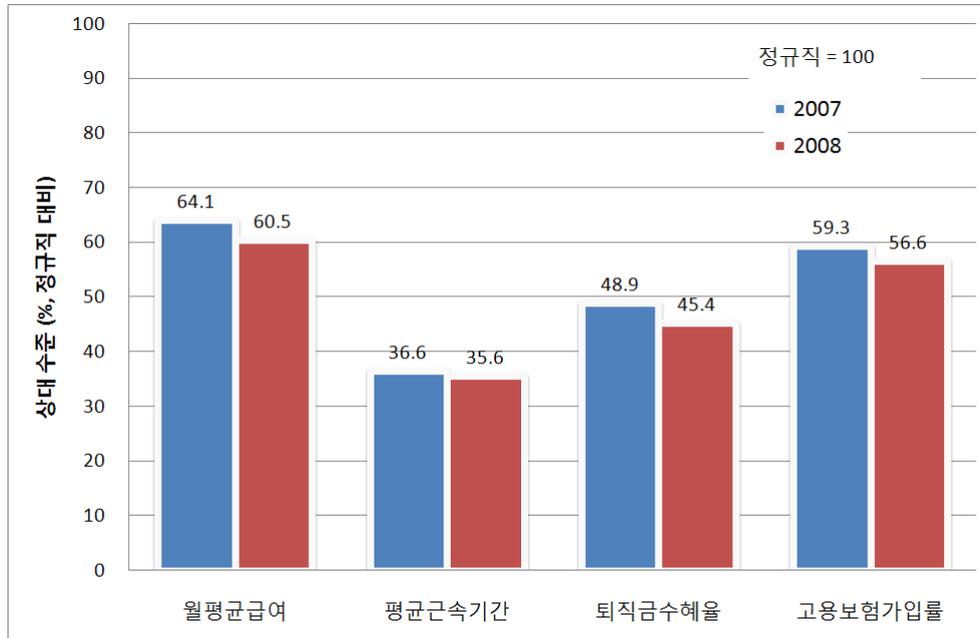
'07년	8월	여성취업자 증가율 감소 시작
	10월	전체취업자 증가율 감소 시작 임시직 일자리 감소 시작
	11월	남성취업자 증가율 감소 시작
'08년	2월	일용직 일자리 감소 시작
	3월	신규취업자 20만 명 밑으로 하락

\* <참고> 청년층과 비임금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 비정규 노동 여건 악화

- 지난 5월 29일 통계청은 ‘비정규 일자리’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근로형태별)’를 발표하였음.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수가 줄어들고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올해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약 564만 명으로, 임금노동자(1,599만 명) 세 명 중 한 명 꼴로 집계되었음. 이 수치는 전년 3월에 비해 약 14만 명에 해당하는 2.3%가 감소한 것에 해당하나(동기간 자영업주 등 비임금노동자도 약 9만 명 감소), 정규직 노동자 증가폭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40만 명, 4.0% 증가-인구 자연증가를 감안하면 부족).
- 더구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노동여건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됨. 월 평균 임금(127만 2,000 원)이 전년에 비해 0.1%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이 약 -4%로 나타남. 이에 따라 정규직과의 상대임금 수준이 2007년 64.1%에서 2008년 60.5%로 무려 3.6%p나 감소했음.
- 정부의 비정규직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임금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됨. 예컨대, 통계청과 같은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을 약 8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김유선(2007)의 집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은 정규직의 50.1%에 불과함. (2007년 8월 기준)

그림 3.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여건 악화



주: 1) 월평균급여(만원)는 각 연도 1~3월 평균임금에 대한 상대비율  
 2) 평균근속기간(개월)은 각 연도 3월 기준(개월)  
 3) 퇴직금수혜율(%), 고용보험가입률(%)은 각 연도 3월 기준  
 출처: 통계청, 2008. 3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근로형태별)”

### 3. 최근 비정규직 일자리 변동의 특징

#### ■ 종류별, 계층별 비정규직 일자리 특징

- 최근 비정규직 일자리 변동을 종류별로 확인해 보면, 한시적 노동자가 가장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한시적(限時的, contingent) 노동자는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하며, 통상적으로 장기근속이 불가능한 (혹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노동자로 이해할 수 있음. 3월 기준으로 39만 3,000명이 감소해서 전체 일자리 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동월 전체 취업자 증가는 18만 4,000명에 그침)
-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층별로 확인해 보면, 남녀 간에 그리고 연령 간에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핵심노동력을 제공하는 남성과 중,장년층은 비전형 노동자가 늘고 시간제 노동자가 줄어 든 반면에, 여성과 청년 및 노년층은 반대로 비전형 노동자가 줄고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음.

- 비전형 노동자란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등 전형적인 고용계약의 형태에서 벗어난 노동자를 의미함. 대기업 등이 하청기업과 계약을 맺고 하청기업이 소속 노동자를 대기업 등에서 일하도록 하는 ‘간접 고용’ 형태의 파견과 용역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표 2. 계층별 비정규 일자리 변동 (2007~2008년)

구분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
남	▼	▼	△
여	▼	△	▼
청년	▼	△	▼
중·장년층	▼	▼	△
노년층	▼	△	▼

주: 1) 핵심노동계층 (남성, 중·장년층)은 “비전형 노동자”가 확대되고 주변부노동계층(여성, 청년과 노년층)은 “시간제 노동자”가 확대됨

2) △ 증가 ▼ 감소

출처: 통계청, 2008. 3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근로형태별)”

### ■ 산업별 특징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비정규직이 감소한 가운데,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만 비정규직이 증가하였음.
- 주목할 산업은 영세 자영업자가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임. 이 산업은 비정규직이 증가하였는데 전체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음(아래 표 참조). 즉, 영세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전체 취업자 감소 효과 발생)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임. 최근 재벌들에 의해 대형화되고 있는 유통과 물류 업체들이 지난 해 이랜드 대량해고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상당한 비율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현상과 잘 일치함.

표 3. 산업별 비정규직 일자리 변동(2007~2008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 식숙박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전기.운수. 통신.금융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34	-64	-82	23	40	-18
(비교) 전체 취업자	-28	-19	-35	-44	321	19

주: 2008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출처: 통계청 <http://www.kosis.kr>, 통계청, 2008. 3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근로 형태별)”

#### 4. 정책적 제언

##### ■ 경기침체에 대비한 고용대책 시급

- 최근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음. 국민은행의 올 3월말 현재 중기대출 연체율은 0.71%로 전년 12월에 비해 0.15% 증가. 아직 연체율 증가폭은 1%p 미만으로 낮지만, 수입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압박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음이 실감되고 있음.
- 하반기 경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외환위기 때 발생한 실업사태에 버금가는 ‘고용 위기’가 닥칠 수도 있음. 한 부문에서 중소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연쇄 파산이 생길 수 있음.
- 정부는 시급히 고용대책을 마련하되, 중소기업의 고용과 유지를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 대책에는 재벌들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장치를 포함해야 함. 중소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수익성이 악화되는 동안 올해 1분기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음.

■ 자영 노동자를 위한 민생경제 대책 필요

-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가장 먼저 화물차 운송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화물차주들로 구성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오는 6월 10일 파업을 결의한 것은 이들의 절박함이 어느정도 인지를 짐작케 하고 있음. 대부분 부채를 떠안고 차를 구입한 이들은 ‘일을 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음. 정부와 화주, 물류업체들은 모두 독점적 권한을 지니고 사실상 가격을 결정해 왔으나 화물 노동자들이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협상을 회피하고 낮은 운송료를 강요해 왔음.
- 이들 외에도 ‘일을 하면 손해’를 보는 자영 노동자들이 비농업 부문에만 약 600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영세 자영자들이 50%를 훌쩍 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IMF 이후 신자유주의가 생산성 향상없이 기형적으로 규모만 확대해 놓은 이들 영세 자영 노동자들의 삶은 경기 변동에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음.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많은 영세 자영자들이 파산 직전에까지 이른 것을 기억해야 함.

■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확대, 노동활동 지원

- 2007년 8월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 미달자는 임금노동자의 11.9%인 189만 명임. 주5일제 근무에서는 한달에 60만 원, 주6일을 하더라도 7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하루 8시간 기준)조차 지급되고 있지 않는데도 적절한 정부의 보호와 노동계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음.
- 비정규 노동자들은 최하 또는 차상위 노동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음. 경기가 하락하면 이들은 그나마 사각지대에서 마저 내몰려 실업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음. 계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쪽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지 우려스러움.
- 정부는 고용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과 노동계가 부당한 노동계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기침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선제대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함. 지난 5월 21일 ‘아르바이트천국’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조상대상자 435명의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54%가 최저임금 미

달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음. 정규 사업장에서 핵심 노동계층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청소년들에게마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음.